

##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구조 분석 - 전문가 집단 대상 AHP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Conflict of '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 Centering on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AHP by Participants -

최 병 학(Choi, Byoung Hahk)\*

### ABSTRACT

The government said that the current 'revitalizing project of the four rivers' of the government is promoted to tackle the chronic water shortage and damages from flood through the policies such as preparing for weather change, the symbiotic relationship of the nature and human beings, territorial recreati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green growth. However various conflicts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to promote the recent 'revitalizing project of the four rivers', and '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is not an exception.

Here upon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conflict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on a broader unit area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 residents and NGOs by dividing into conflict types by acting subject and characteristic, and then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conflict by dividing this into the righteousness of project, environmental destruction, collecting the public opinion, compensation issues and conflicts related to the overlapping and waste of the budget.

In particular, in the examination by specialist, the examination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onducted with three indexes by field and twelve detailed factors in order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bout various conflict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promotion of '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and the pairwise comparison in which two elements are mutually compared at a time for each question was utilized.

This was examined through e-mails since July 15th, 2010 through July 25th with members of city and county assemblies, NGOs, residents, specialists, the press and public servants in charge as the subject, and 40 copies among the total 85 copies were withdrawn(the rate of withdrawal of 47%) and all of them were used an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mong the field of measurement indicators about conflict were in the order of the main cause of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the main cause of conflict between governments and the main cause of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Second, about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mong the field of 'measurement item' about conflict, 'the conflict that occurs due to the relative difference of gain and loss among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겸임정교수

local governments' was the most important in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s, and 'the conflict that occurs due to the inactive consultation with residents' was the most important in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and 'the conflict that occurs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in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Thir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by measurement element of conflict between governments were in the order of the relative difference of gain and los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conflict over co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inharmony of exercise of authority between governments and the overlapping and waste of the budget to promote the construction.

Fourth,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by measurement element of conflict between governments and residents were in the order of the conflict of the inactive consultation with residents, the controversy over compensation, th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and conflict and conflict over tackling the inconvenience of residents.

Fifth,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by measurement element of conflict between governments and NGOs were in the order of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the controversy over the righteousness of the project, the loss of cultural assets and securing water resources.

In this point of view, there are conflicts of '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in relation to 'the value conflict' which is an original opposition to 'the revitalizing project of the four rivers'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the grand canal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government relations that still causes the relative difference of gain and loss and so on, the issues of consultation with residents and compensation,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nd the loss of cultural assets. Rather, this was not largely embossed as the main cause of conflict in relation to securing water resources or flood control.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largely strengthen enough communication and agreement, participation and opening to the public, transparency and feedback with not only local governments but also residents and NGOs as the subject and should focus on minimizing the main cause of conflict related to '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Key words: 금강살리기사업(The revitalizing project of Geum River), 갈등유형(conflict type), 갈등구조분석(analysis of the structure of conflict), 소통과 합의형성(communication and making mutual agreement),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1. 서론

당초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네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종합대책 수립, IT·ET·GT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네트워크 구축, 치수 선진화로 세계적 녹색국가로의 발돋움, 지역주민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통해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 한다. 뿐 만 아니라,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자 한다(국토해양부, 2009: 3-4).

그러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무려 2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급하게 수립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빠르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서둘러 착공하였으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공사진행과정에서 수질관리, 생태계 훼손 문제의 심각성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타당성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이 정치·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며, 이것이 6.2 지방선거 등 국민여론이 선거결과에 반영되면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지식인) 등 실로 각 분야에서 많은 갈등으로 급속히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7월말 현재, 전국 「4대강살리기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로 계획을 11% 초과하고 있다.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5억 2천만<sup>m</sup> 중 1억 3천만<sup>m</sup>)가 진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강살리기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상남도에, 7월 30일에는 대전국토관리청장 명의로 충청남도에 각각 공문을 보내 8월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했다고 8월 1일자로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0. 8. 1).<sup>1)</sup>

이는 해당 지자체가 공식 문서로 입장을 밝혀 대행공사를 반납하면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지사가 반대하는 데 비해 13개 시·군 단체장은 수해방지와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을 계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부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전일보, 2010. 8. 2; 충청투데이, 2010. 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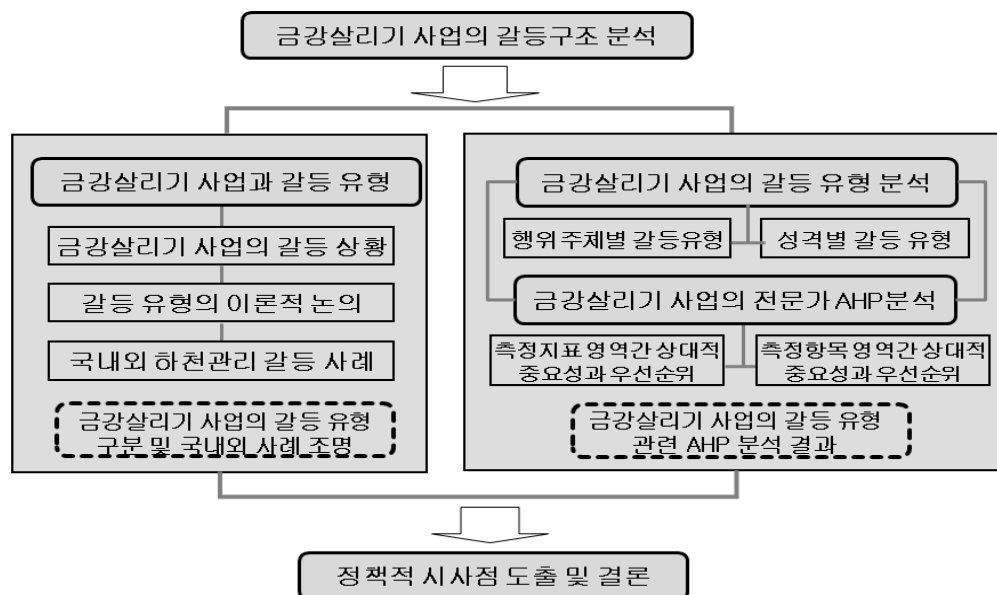
한편,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은 이미 국책사업의 성격을 벗어났으며, 정부·여당과 보수진영, 야당과 진보진영의 주장이 찬반으로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한쪽에서 수해방지와 수자원확보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졸속추진과 생태계 파괴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이 완고하고 강력해서 가장 중요한 현지주민의 입장은 끼어들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1) 이에 충청남도 산하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부지사는 "이 문제는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8월 2일 4대강 특위 위원들과 만나 입장을 정리한 뒤 국토부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지사는 7월 29일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싸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앞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뒤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0. 8. 1; 7. 29).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자가 2009년도에 수행했던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연구(최병학, 2009a,b,c 및 최병학 외, 2010a)에 이어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구조 분석을 전문가 대상의 AHP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행위주체별 및 성격별 갈등유형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주민, NGO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한 다음, 다시 이를 사업의 타당성, 환경파괴, 여론수렴, 보상문제, 예산의 중복 및 낭비 관련 갈등 등으로 나누어 갈등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내·외의 하천갈등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앞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 및 해소방향과 관련한 종합적 시사점을 도출, 제시하였다.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을 위해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영역별 지표와 세부요인을 선정하여, 각 문항별로 한 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한 축인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는 갈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 조사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대안수립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은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상황, 갈등유형 이론, 국내외 갈등사례를 토대로 행위주체별, 성격별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한 측정지표 영역간 및 측정항목 영역간 상대적 중요성과 우선순위 분석을 거쳐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결론으로 이어지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분석의 틀

## II. 「금강살리기 사업」과 갈등유형

### 1.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상황

#### 1) 「금강살리기」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의 공식명칭은 「금강살리기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 6월 15일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금강이 흐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이다(충청남도, 2010. 3).

금강은 9,915.81km<sup>2</sup>의 유역면적을 자랑하며, 대부분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에 해당된다. 금강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354.6mm이며, 남한 전체의 1/10에 해당된다. 금강의 상류에는 용담댐, 중류에는 대청댐, 하류에는 금강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류의 총 길이는 395.9km에 달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해마다 반복적인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용수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전, 수변공간을 건전하게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가 밝힌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①이상기후에 따른 홍수와 가뭄의 근원적 방지, ②생태계 다양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녹색생태벨트 구축, ③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극대화를 통한 사람·도시·하천이 상호 조화되는 Water Front 조성, ④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등이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0. 7. 25; <http://search.cy.co.kr/view>).

이미 정부(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통해 밝힌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가뭄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홍수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둘째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수상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다.<sup>3)</sup>

2)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2011년 약 8억m<sup>3</sup>의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가뭄시 지역의 제한 급수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되는 다목적 댐은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물부족('16년 10억m<sup>3</sup>)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

셋째는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 수질오염원의 집중관리, 하천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복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4대강살리기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강(江)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프로젝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한다(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http://www.4rivers.go.kr>).

이에 따라 「금강살리기 사업」은 금강유역에 2조 4,727억원을 투입하여 본류사업은 2011년까지,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공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단위:억원)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	비고
합 계(억원)		-	24,727	
국토해양부	소 계		16,598	
	하도정비(준설)	0.5억 m³	3,720	
	보	3개소	2,023	
	생태하천 조성	41개소 124km	5,772	
	제방보강	26개소 71km	2,371	
	자전거 도로	248km	303	
	기 타	-	2,409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30개소	6,767	
환경부	수질대책	99개소	1,362	

※ 연계사업(120km/3,181억원), 수공시행사업(44km/1,013억원) 별도

## 2)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의 갈등양상

최근 「금강살리기 사업」이 평균 27%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 중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10년 7월 29일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의 종합 공정률은 22.81%로 금강(한강 포함) 26.21%, 낙동강 22.45%, 영산강 17.77%, 섬진강 15.64% 등으로 집계됐다. 한강을 제외한 금강수계 공정률은 27.17%로 「4대강살리기 사업」 가운데 가장 높다. 또한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은 연말까지 60% 완료 예정이다(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010. 8. 1; <http://www.4rivers.go.kr/new/kor/>).

대전청이 시행중인 터키공구만의 공정률은 선도사업인 행복1지구가 46.73%로 가장 앞서 있고 행복2지구 41.50%, 금강 6공구 33.70%, 금강 7공구 31.05%, 금강 1공구 16.57%, 금강5공구 12.57% 순이다. 사업지구내 3개 보의 공정률은 평균 46.94%로 금남보 68.39%, 금강보 45.87%, 부여보 43.27% 등 비교적 높은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위탁받은 일부 지자체에 대해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진행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2010. 8. 2).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의 주요공정인 보건설과 준설공사 등은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공사, 생태공원 조성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했다. 현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지자체가 공사를 대행하는 공구는 54곳(31.8%)이다.<sup>4)</sup>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 사업권을 부여한 총 54개 공구 중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에 각각 13개와 4개, 5개 공구를 총 1조 5,509억 원의 정부예산으로 공사하도록 했다. 경상남도과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맡은 낙동강과 금강, 한강 공구는 준설과 환경정비사업 중심으로 3개 도(道)의 총 22개 공구 어느 곳에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보는 건설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시·도지사들이 정부, 여당의 압박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며, 사업포기가 선언된다면 환경정비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주민 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도지사들이 관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 4대강 사업 전체를 찬성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으로 소모전을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논쟁이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2. 갈등유형의 이론적 논의

오늘날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은 행위(사업)주체들간의 갈등과 갈등성격상의 갈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강성철 외, 2006: 145-151; 최병학, 2009c: 21-22).

행위(사업)주체들간의 갈등은 주민과 정부 및 지자체 간의 갈등, 정부와 광역 및 기초단체간의 갈등, 각 지자체 간의 갈등, 기타 주민·NGO·사업집단 간의 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격에 따른 갈등은 개인적 이해갈등, 공익적 가치갈등, 유사사업 연계 및 경합갈등, 선호사업 유치갈등 등의 양상을 띤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유형은 갈등분야에 따라 또는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공공정책 혹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흔히 갈등주체, 갈등내용, 갈등성격, 진행단계, 갈등이슈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갈등의 속성을 이해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갈등의 주체(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갈등의 유형은 개인갈등, 집단갈등 및 조직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갈등은 조직내의 두 사람 이상의 대인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 의견차이, 역할 경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집단갈등은 조직내 수직적 또는 수평적 계층 간에 발생한다. 중앙정부 내의 부처 간 갈등, 정부간의 갈등

4)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김지사와 충청남도 안지사 등은 지자체가 대행하는 일부공사에 대해 사업재검토와 공사중단 등을 선언한 바 있다(서울신문, 2010. 6. 17).

등(중앙과 지자체, 지자체간), 그리고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이익집단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행동주체들 간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조직갈등은 조직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편의 등을 둘러싼 배분문제를 두고 조직 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의미한다.

갈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갈등유형은 지방행·재정분야의 갈등, 지역개발 분야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행·재정 분야 갈등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인사, 조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행정 관련 갈등, 과세 및 세제와 관련한 지방재정 관련 갈등으로 구분되며, 지역개발분야 갈등은 하천이용 및 관리, 광역서비스공급시설 등 광역시설 관련,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 갈등 등으로 구분된다(나태준 외, 2004: 19).

한편, 갈등의 성격을 기준으로 할 때 흔히 갈등의 유형은 이익갈등과 권한갈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이익갈등은 이해관계나 욕구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데 대부분 토지이용, 시설입지, 관리에 있어 관련 지역주민 간 혹은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에 대한 이익대립으로 발생하며, 기피갈등(NIMBY), 유치갈등(PIMFY), 타지역에 대한 피해유발 갈등, 공익가치 추구 갈등 등이 있다.

그러나 권한갈등은 이해당사자간의 권한과 책임귀속의 여부 내지 적합성에 관련된 분쟁으로 정부간 갈등유형에서 주로 발생하며, 각종 인·허가, 재산의 관리·처분·이용에 따른 분쟁 등이 여기에 속하며, 시설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

<표 2> 갈등의 유형

분류 기준	유 형			내 용
행위 주체	개인갈등			조직 내 두 사람 이상의 대인간의 오해, 의견차이, 역할 경쟁 등으로 발생
	집단갈등	정부간	수직적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수평적	중앙정부 부서간 광역 ↔ 광역자치단체 기초 ↔ 기초자치단체
		정부↔ 주민	정부↔ 주민	중앙정부 ↔ 주민 광역자치단체 ↔ 주민 기초자치단체 ↔ 주민
			정부↔ NGO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환경(시민)단체
	조직갈등			조직 ↔ 조직
사업 내용	지방행·재정분야	지방행정	행정구역, 인사, 조직, 기능배분, 권한	
		지방재정	재정, 과세, 관리 기타	
	지역개발분야	하천관련	댐건설·관리, 용수이용, 수질보전, 상-하류지역간 갈등, 상수원 보호지역	

		광역시설관련	도로개설, 광역상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분뇨처리시설, 사회복지시설, 각종 사회위험시설
		지역개발관련	지역개발사업,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갈등 성격	이익갈등	기피갈등(NIMBY), 유치갈등(PIMFY), 타지역 피해유발 갈등, 공익적 가치추구 갈등	
	권한갈등	비용(분담)갈등, 권한·권리 갈등, 협의부진 갈등	
표출 양상	잠재적 갈등	갈등조건이 존재, 갈등당사자들이 이를 자각하고 있으나 외면적 행위는 감추어진 상태	
	현재적 갈등	갈등당사자들의 불만, 경쟁심이 외부로 표출되어 행동하는 상태	
쟁점 범위	쟁점의 공간적 범위	지역내 갈등, 지역간 갈등, 전국적 갈등	
	쟁점의 계층적 범위	일반국민 대상갈등, 특정계층 대상갈등	

자료 : 나태준박재희, 2004: 19; 박형서 외, 2004: 26-27; 최병학, 2009c: 21-23 등을 참고로 재작성.

갈등의 표출 여부에 따라 잠재적 갈등과 현재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대립하고 있는 두 행위주체 사이에 잠재적 갈등이 존재할 때에는 오직 이슈만 존재하지만,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잠재적 갈등이 현재화하게 된다고 한다(R. E. Walton and J. M. Dutton, 1969: 73-84). 즉, 잠재적 갈등은 갈등을 일으킬 조건들이 존재하고 갈등 당사자들이 이를 지각하고 있지만, 갈등에 따르는 외면적 행위들이 감추어진 상태의 갈등을 말하며, 현재적 갈등은 갈등 당사자들의 불만과 경쟁심 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행동하는 상태의 갈등을 말한다.

또한 갈등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와 계층적 범위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형서 외, 2004: 26-27). 이는 지역내 갈등, 지역간 갈등, 전국적 갈등이 있으며, 갈등의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계층적 범위에 따라 일반주민이나 전체국민과 관련된 갈등과 특정계층과 관련된 이슈로 인한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국내·외 하천관리사업의 갈등사례

현단계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은 초기에 비해 갈등의 내용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해결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차제에 국내·외 하천관리사업의 갈등해결 관련사례를 통해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 1) 국내사례와 시사점

첫째, 한강의 사례는 저수로 정비를 통한 치수기능 확대, 고수부지 조성, 휴식공간 확보, 올림픽대로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일찍부터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물리적 하천개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추진시 지역협력 및 협의회 등을 통한 의사소통과 합의형성,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가 되고 있다(조용현, 2009: 4-16).

둘째, 안양천의 경우는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서울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산대교 등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 하상 퇴적물 준설,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협의회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수질오염도의 감소, 규모의 경제, 자치단체간 협력 관계 도모 및 광역적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우이다(최정권, 2009: 35-40).

셋째, 인천광역시 5개 하천살리기(승기천, 나진포천, 공촌천, 굴포천, 장수천)는 당초 민·관 전문가들 간의 다양한 시각차이의 조정 요구가 발생하여 효율적, 협력적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 장수천을 필두로 승기천 등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고자 하였으나, 참여부족과 관 중심의 사업추진에 의한 한계로 성과는 그리 크지는 않았다(<http://www.icriver.or.kr>).

넷째, 수원천의 경우는 1991년부터 수질오염이 계속 악화되고, 악취발생으로 수원천을 복개하자는 여론에 따라 수원시는 1994년에 교통난 해소와 주변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원 상권의 중심인 지동교와 매교 사이 790m 구간을 콘크리트로 복개하였으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시민들의 결집력에 의해 환경개선을 위해 중단된 사례가 되고 있다(김충관 외, PGA습지생태연구소, 2009. 1. 19).

다섯째, 청주의 무심천은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심 속에 남아있는 대표적 녹지, 친수공간이라는 점과 산림축이 심각하게 훼손된 도심 생태계에서 무심천은 생태이동통로 및 생물서식공간으로 중요성이 인식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천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여 당초의 복개계획을 중단하고 하천공원을 조성한 수원천과 같이, 청주에서 펼쳐진 무심천 하상구조물 반대운동은 자연형 하천 살리기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룩한 경우이다(박창재, 2002).

여섯째, 부산의 온천천 사례는 1970년대 이후 홍수에 대비한 직강화(直降化) 하천계획과 무분별한 복개, 하천제방의 콘크리트화, 하천 둔치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하천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졌으나, 2000년 9월 불과 3~4년의 노력으로 생활하수를 흘려보내지 않고 오염된 하천바닥을 깨끗이 준설하자 물고기들이 뛰노는 공원으로 변화시켰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시민공원을 조성, 하천을 정비하여 산책로를 비롯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2002년에는 「온천천 살리기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종합적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2005년 11월 4일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낙동강 원수를 3만톤/일 이상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량 문제도 해결된 상태이다(배재현, 2009: 164-165).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국내의 하천갈등 사례는 한강, 안양천, 인천시 5개 하천, 수원

천, 청주 무심천, 부산의 온천천은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가 공간을 제공하는 명실공히 친수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며 한강, 안양천, 청주 무심천, 부산 온천천은 협력과 협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으나, 인천은 민·관·전문가 주도하에 협력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만큼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수원천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소외지역의 관리부족으로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훈과 지적은 「금강살리기 사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2) 국외사례와 시사점

첫째, 라인강은 독일·프랑스 등 7개 국가에 걸쳐 총연장 326km를 가지고 있으나, 2차대전 후 용수사용량 증가 및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악화, 생태계 파괴, 홍수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라인강 오염과 보존을 위한 관련국가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어 상호이해에 근거한 협력 및 공동정책 추진으로 갈등해결 및 공동사업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되고 있다(Frank Frieesecke, 2005).

둘째, 요르단강은 대표적인 분쟁사례로서 1948년 요르단강의 원천(源川)이 속해 있는 갈릴리지역(Galilee Region)을 점유하기 위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 1991년 중동평화회의가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어, 이스라엘과 PLO는 1993년 물분쟁에 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물 행정기구 설치를 약속하고,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약르묵강의 활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강은 인종·종교·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1990년 이후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Munther J. Haddadin and Uri Shamir, 2003: 41).

셋째, 메콩강의 경우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해 메콩강 유역국가들이 메콩강 개발에 소극적이었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메콩강은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비슷한 여러 국가들간의 국제기구(GMS: 메콩정상회의)의 참여와 6개국간 1995년 메콩협약의 추진을 통해 국가간 소규모사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상호협력을 추진하여 유역개발과정에서의 지역간 협력의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Mekong River Commission, 2007).

넷째, 나일강은 최근까지도 연안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상태이며, 하류에 위치하면서 경제적·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집트의 무력 개입의지는 이 지역의 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일강에 대한 용수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며, 향후 인구증가와 관계면적의 증가로 인해 ‘기득수리권’이나 유량배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959년의 나일강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협정이 금년 중에 다시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Mesfin Abebe, 2010).

다섯째, 리오그란데-콜로라도강 사례는 유역국가는 미국과 멕시코이며, 이들 양국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건조한 농장지역들이 대부분이어서 분쟁발생 개연성이 높았으며, 미

국과 멕시코는 공유하천을 둘러싼 수량 및 수질문제를 양국간 조약<sup>5)</sup>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향후 주요이슈는 환경문제와 생태계 보호문제가 될 전망이다(Goliath, 2003).

여섯째, 템즈강의 경우는 폐수로 악화된 수질개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기되어 2003년 Environment Agency가 계획을 수립, 착수함으로써 지자체 및 주민, NGO 등 70개 이상의 그룹과 함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회 모든 계층의 자유로운 접근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한 레저 및 관광활성화를 추진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Environment Agency, 2010).

일곱째, 포토맥강은 총연장 665km로 버지니아주 ~ 워싱턴을 잇는 강으로서 이미 수질 오염 해결을 위한 포토맥강 살리기 지역간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무려 530만명 주민의 식수원인 포토맥강의 수질오염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질, 환경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 자리매김된 대표적인 강 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Interstate Commission on the Potomac River Basin, 2009).

이상을 종합해 보면 라인강, 메콩강, 나일강은 국가간 상호협력 및 공동정책 추진으로 협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리오그란데-콜라라도강은 유역국가들 간의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템즈강과 포토맥강은 지자체 및 주민, NGO 등이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요르단강은 인종·종교·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성과가 크게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금강살리기 사업」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 III.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 분석

여기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관하여 행위 주체별로 개인, 집단, 조직 갈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 집단갈등을 정부간, 정부↔주민간으로 세분하여 갈등의 유형을 분류한다. 갈등의 성격에 따라 가치, 이익, 권한 갈등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타당성, 환경파괴, 여론수렴, 보상문제, 예산의 중복·낭비와 관련한 갈등으로 세분하여 갈등유형을 분석하였다.<sup>6)</sup>

5) 1944년 콜로라도강과 티주아나강 그리고 리오그란데강의 물이용에 관한 조약 체결,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조정기구로서 1944년 미국·멕시코의 국경과 물위원회(IBWC) 설립, 1993년 국경환경조정위원회(BECC) 설치가 뒤따랐다.

6) 이는 본 연구자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에서 2009~2010년간 금강살리기 갈등예방관리사업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동향분석을 토대로 재정리한 자료임을 밝힌다(최병학, 2009a, 2009b, 2009c, 2010); <http://pcpf.or.kr/>

## 1. 「금강살리기 사업」의 행위주체별 갈등유형 분석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간 갈등에는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이 존재하며, 정부-주민간 갈등에는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과 정부와 NGO간의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별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중앙정부간, 광역↔광역, 기초↔기초간의 수직적 갈등유형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강 물막이 공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주시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백제신문, 2009. 8. 9).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사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반납·해약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논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동아일보, 2010. 6. 15).

### 2) 중앙정부간, 광역↔광역, 기초↔기초간의 수평적 갈등유형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금강하구둑 철거와 관련한 인접지역인 서천군과 군산시 간의 철거에 따른 수질악화, 생태계파괴, 농업용수 이용문제, 홍수문제 등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서천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대전일보, 2009. 2. 14).

둘째, 정부의 청사진 제시와 홍보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전초사업’의 논란을 빚는데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정 여부와 생태계 및 환경파괴 및 속도전 논란 등으로 갈등, 생태계 파괴 논쟁, 수질악화 개선 논란, 오염된 퇴적토를 파내는 과정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연합뉴스, 2010. 5. 23).

### 3) 중앙정부↔주민, 광역↔주민, 기초↔주민간의 갈등유형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이 급류를 타면서 하천점용 및 보상을 둘러싸고 관계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이 본격 점화되어 사업지구 내 하천에 수십~수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재배해 온 농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대토를 요구하고 나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중도일보, 2009. 4. 8).

둘째, 정부가 청양군 칠갑산 정상의 천장호 독건설 사업에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금강에 물을 보내 강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마을 개발 후 수물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대전일보, 2010. 3. 20).

셋째, 4대강 사업으로 농민피해는 크고 보상은 미미하며, 점용허가를 못받은 농민은 영농보상에서 제외되어 50% 이상 생업을 잃어 피해가 크다(한겨레신문, 2010. 3. 18).<sup>7)</sup>

7) 정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주변의 영농보상 대상자들에게 이미 보상협의

넷째,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장과 준설토 적치장을 만들어 주민의 공분을 사고, 주민들도 모르게 「4대강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토석(토사) 채취허가를 내어 피해를 주고 있다(한겨레신문, 2010. 3. 19).

다섯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으로 운행되는 덤프트럭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위험 및 난폭운전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덤프트럭은 과속을 하고 있고 공사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백제신문, 2010. 6. 23).

#### 4) 중앙정부, 광역, 기초↔환경(시민)단체간의 갈등유형

첫째, 천주교의 여러 지역 성당에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리고, 전국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19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사회운동이 천주교계를 시발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중앙일보, 2010. 3. 26).

둘째, 「4대강살리기」 공사착공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은 여전하고 계속 생태계 훼손문제가 거론되고 있다(연합뉴스, 2010. 5. 3).<sup>8)</sup>

셋째, 오염된 퇴적토(오니토)를 파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환경단체와 정치권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2010. 5. 3).<sup>9)</sup>

이상을 토대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행위주체별 갈등유형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금강살리기 사업」 행위주체별 갈등유형

구분	갈등유형		사례
행위주체	정부간	수직적	금강 물막이 공사를 둘러싼 정부↔공주시의 갈등
			4대강 사업 타당성에 관한 중앙정부↔야당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갈등
			농지 리모델링 인·허가를 둘러싼 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4대강 사업 지속성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수평적	금강 하구둑을 둘러싼 서천군↔군산시 간의 갈등
			4대강, 금강(부여보) 살리기 사업 홍보를 둘러싼 선관위↔국토해양부 간의 갈등
			4대강사업타당성 정부·여당↔야당간, 광역단체장간 갈등

취지를 통보하여, 4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십년 동안 강변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2년치 영농손실 보상금만 받고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8)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썩부쟁이'의 경우 남한강변에 이 식물의 군락지가 발견되면서부터 환경단체와 정치권의 비난이 속출하면서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9) 정부(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비소가 우리나라 토양에서 흔히 측정되는 농도이고,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시커먼 진흙이라고 모두 오니토는 아니며, 지금까지 조사결과 4대강 퇴적토의 오염도는 토양환경기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 ↔ 주민	정부 ↔ 주민	「금강살리기 사업」 보상에 관한 정부↔주민간의 갈등
			4대강 사업 여론 수렴을 둘러싼 정부↔주민간의 갈등
			청양 칠갑산 천장호 독 건설 관련 정부↔주민간의 갈등
			농지 소멸 보상을 둘러싼 정부↔주민간의 갈등
			준설토와 토석채취허가를 둘러싼 정부↔주민간의 갈등
			보 설치에 따른 정부↔주민간의 수질오염 관련 갈등
			「금강살리기 사업」 공사 관련 공주시↔주민간의 갈등
		정부 ↔ NGO	환경파괴를 둘러싼 정부↔종교단체 간의 갈등
			4대강 사업 추진관련 정부↔종교단체간의 갈등
			단양쑥부쟁이 멸종위기에 관한 정부↔환경단체간 갈등
			오염된 퇴적토 수질악화 관련 정부↔환경단체간의 갈등
			수질개선 여부를 둘러싼 정부↔시민단체 소송 갈등
			4대강사업 타당성 관련 정부↔시민, 종교단체간 갈등
			4대강 전면 중단을 촉구를 위한 단식 기자회견을 통한 정부↔종교단체 갈등
			4대강 홍보자문단 해체 관련 지자체↔시민단체간 갈등

## 2.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격별 갈등유형 분석

### 1) 사업타당성 관련 갈등유형

첫째, 조계종의 대표적 사찰 가운데 하나인 마곡사의 합류로 충남에서는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3대 종교가 모두 반대운동에 나서게 되어,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끌어온 「금강살리기 사업」의 반대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0. 3. 24).

둘째,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수질오염 총괄 방제기관인 수질오염 방제센터의 조직축소와 공기부양정 및 방제장비를 갖춘 방제선박의 운영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동아일보, 2010. 4. 6).

셋째, 금강을 포함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목표 중 하나가 용수부족에 대비한 용수원의 추가확보이나, 전국 용수공급량은 예측량보다 여유가 있어 보 설치 등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금강정비사업은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하천의 호소생태계를 고려한 수질예측과 준설로 인한 생태계 영향평가, 오염 퇴적토 평가 등을 누락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뉴시스, 2010. 5. 14).

넷째, 6.2 지방선거 후 충청권 단체장들은 연대하여 생활하수 정화소하천 살리기로 전환을 주장하였으나,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중앙일보, 2010. 6. 14),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식 대통령 축하에서도

세종시와 4대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 2010. 9. 17).

다섯째, 일부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사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국가가 직접공사, 중단·연기로 계약불이행시 구상권 행사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밝힌 바 있다(동아일보, 2010. 6. 15).

## 2) 환경파괴 관련 갈등유형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개가 더 많은 5개의 보가 설치되는 것으로 드러나 생태·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제기해 온 보 설치 「금강살리기 사업」 구간에만 2곳이 추가되면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중도일보, 2009. 6. 24).

둘째, 주민들은 국가사업이라면 주민공청회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어 이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사유재산 피해, 주택붕괴 우려, 금(crack), 부대시설, 건축물(옹벽, 담장 등) 지하수 오염, 분진, 소음, 배수시설, 자연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경향신문, 2010. 3. 29).

셋째, 「4대강살리기 사업」의 남한강 공사현장에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꾸구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중앙일보, 2010. 4. 23).<sup>10)</sup>

넷째, 전국 4대강의 바닥뿐만 아니라 강 유역의 다목적댐으로 유입되어 쌓이는 모래의 양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2010. 6. 20).<sup>11)</sup>

## 3) 주민 여론수렴 관련 갈등유형

첫째, 충남도가 「금강살리기 사업」의 충남지역 9개 지구가 모두 착공하여 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조선일보, 2010. 3. 26).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대강살리기」 홍보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정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4대강설명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동아일보, 2010. 5. 14).

셋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제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4대강 홍보자문단 구성과 시민단체가 신임 광역단체장들에게 이의 즉각 해체를 촉구하였으며, 정부가 소통과 대화 아닌 일방적인 홍보로 부정적 여론을 돌리려 한다면 더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금강일보, 2010. 6. 30).

10)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꾸구리의 불가피한 개체수 감소가 예측되며, 공사 단계의 영향을 피해 꾸구리가 상·하류 지역과 지천으로 회피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1)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는 담수능력 확대를 위해 다목적댐에 쌓인 모래를 준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준설과정에서의 2차 환경오염이나 경제성 등 문제로 실행에 나서는 못하고 있다면서, 퇴사량 증가로 인한 용수확보나 공급에는 차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 4) 보상문제 관련 갈등유형

첫째,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오랫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해온 농민들이 생존 차원에서 대토를 요구하고 나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지 대토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하천점용 및 보상을 둘러싼 관계기관과 농민간 갈등이 불가피하다(중도일보, 2009. 4. 8).

둘째,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농민피해는 막대하나 보상은 미미한 상태이며, 하천둔치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대체농지를 마련하기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한겨레신문, 2010. 3. 18).

#### 5) 정부간관계(IGR) 관련 갈등유형

수질오염과 생태계복원을 위해서 금강하구둑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금강하구둑을 둘러싸고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지자체들간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에 금강하구둑 철거문제는 향후 충남도와 서천군이 전북도와 군산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대전일보, 2009. 2. 14).

#### 6) 예산의 중복·낭비 관련 갈등유형

첫째,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금강에 쌓은 석축이 장맛비에 쓸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4대강살리기」 계획에 따라 하류 1km 지점에 소형 댐을 쌓을 예정으로 쌓은 석축은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 금강석축이 '자연'과 '중앙정부'의 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백제신문, 2009. 8. 10).

둘째, 정부로부터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비를 떠맡아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4대강 홍보사업에 대학생 서포터즈를 내세워 4대강 사업지역 체험·탐방홍보, 대도시 길거리 홍보, 팀별 블로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나, 이는 홍보에만 치중할 계획으로서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0. 7. 4).

이상을 토대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격별 갈등유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4&gt;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격별 갈등유형

구분	갈등유형		사 례
갈등 성격	가치 갈등	사업 타당성 관련 갈등	4대강 사업의 원초적 타당성 논란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4대강 사업 반대운동 확산
			방제선박 결여, 수질오염센터 부실 타당성 논란
			잘못된 용수사용 예측량 근거 4대강사업 위법 논란
			6.2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여·야당 사업재검토
			정부의 4대강 환경평가 타당성 검토를 무시하여 민심의 반대운동 확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단체장, 정부와 충청권 당선자간의 사업 재검토 논란
			4대강사업 반납·해약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환경 파괴 관련 갈등	금강 살리기 보 설치에 대한 환경파괴
			금남보 공사현장 종교단체 환경훼손 제기 논란
			청양 칠갑산 천장호 독 건설 논란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생태계 파괴, 수질문제 논란
			준설토와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환경파괴
			단양쑥부쟁이 멸종위기에 따른 생태계 파괴 논란
			수질개선과 수질악화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취소 청구소송
			강유역의 퇴사량 증가로 용수확보 공급 차질 논란
			금강 둔치에 대규모 준설토 적치장 수해 우려
		여론 수렴 관련 갈등	4대강 사업 반대여론 정책반영갈등
			충남 홍보자료에 무색한 불법공사
			정부의 민간인 대상으로 추진한 몰래 홍보
			4대강 홍보자문단 해제 촉구 관련 갈등
	이익 갈등	보상 문제 관련 갈등	하천점용 및 보상을 둘러싼 보상 갈등
			충남 부여 농지 소멸 보상을 둘러싼 보상 갈등
			금강사업 보상에 대한 행정기관과 농민간의 갈등
	권한 갈등	정부간 관계 관련 갈등	금강 하구둑 철거 논란에 대한 갈등
			4대강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둘러싼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의 갈등
		예산의 중복·낭비 관련 갈등	강물막이 공사 관련 공주시↔정부 간의 갈등
			4대강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예산 낭비 우려
			대학생들을 통한 4대강 홍보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

이상과 같은 「금강살리기 사업」의 행위주체별 및 성격별 갈등유형의 결과는, 동일한 시점에서 관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정 갈등 내용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갈등의 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금강살리기 사업」의 전문가 집단 AHP 조사분석 결과

### 1. 「금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유형별 우선순위 비교분석

#### 1) 전문가 조사의 자료수집방법과 의견조사

본 전문가 조사결과와 분석단계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을 위해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군의회, NGO단체, 언론, 갈등관리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집단은 이들 중에서 각 영역별로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은 2010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e-mail을 통해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설문지는 전체 85부 중 40부(회수율 47%)를 회수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프로그램은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역별 지표 3개, 각 영역별 지표를 토대로 세부요인을 12개로 각각 선정하였다. 이들 설문내용의 구성은 각 문항별로 한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원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위는 1에서 9까지의 수와 이의 역수들로서 각 문항별로 평가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와 같이 AHP 설문 조사의 응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문항별로 전체 사례 N개의 기하평균값을 구해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우선순위를 밝혔다. 특히 일관성 비율(CR)이 0.2 이상인 응답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전체 40부 중 30부(75%)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sup>12)</sup>

####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성	38	95	95
	여성	2	5	100
	계	40	100	
연령	21-30 이하	2	5	5
	31-40 이하	10	25	30
	41-50 이하	19	47.5	77.5

12)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응답지에 대해 사전 일관성 비율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일관성 비율(CR)이 0.2 이상인 경우, 서수적(序數的) 순위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비적으로 검증하여 해당 응답지를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에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51-60 이하	7	17.5	95
	61-70 이하	2	5	100
	계	40	100	
학력	대학 졸업	12	30	30
	석사	4	10	40
	박사	21	52.5	92.5
	기타	3	7.5	100
	계	40	100	
직업(직종)	지방의원	3	7.5	7.5
	NGO, 주민단체	6	15	22.5
	대학교수	12	30	52.5
	공무원	9	22.5	75
	연구원	4	10	85
	언론계	6	15	100
	계	40	100	

### 3)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측정지표’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갈등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측정지표 영역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부-주민간 갈등요인, 정부간 갈등요인, 정부-NGO간 갈등요인’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표 6>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측정지표 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영역	정부간 갈등	정부-주민간 갈등	정부-NGO간 갈등
상대적 중요도	0.332	0.344	0.325
우선순위	2위	1위	3위

※ CR(일관성 비율) : 0.02

### 4)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측정항목’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갈등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해본 결과, 정부간 갈등에서는 ‘지자체간 상대적 손익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고, 정부-주민간 갈등에서는 ‘주민들과의 협의 부진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NGO간 갈등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 생태계과피로 발생하는 갈등’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1) 정부간 갈등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정부간 갈등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지자체간의 상대적 손익 차이-정부와 지자체간 비용갈등-정부간 권한행사의 부조화-공사추진 예산중복 낭비’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7&gt; 정부간 갈등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영역	측정요소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정부간 갈등	공사추진 예산 중복 및 낭비	0.208	4위
	지자체간 상대적 손익 차이	0.311	1위
	정부와 지자체간 비용 갈등	0.255	2위
	정부간 권한행사의 부조화	0.226	3위

※ CR(일관성 비율) : 0.02

## (2) 정부-주민간 갈등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정부간 갈등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주민들과의 협의 부진 갈등-금강살리기 사업의 보상논란-개발이익의 분배와 갈등-금강살리기 사업 중 주민불편해소 갈등’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8&gt; 정부-주민간 갈등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영역	측정요소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정부-주민간 갈등	금강살리기 사업의 보상논란	0.281	2위
	주민들과의 협의부진 갈등	0.286	1위
	개발이익의 분배와 갈등	0.228	3위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민불편해소 갈등	0.204	4위

※ CR(일관성 비율) : 0.00671

## (3) 정부-NGO간 갈등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정부간 갈등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금강살리기 사업의 생태계파괴-금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논란-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유실-금강살리기 사업 중 수자원 확보’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9&gt; 정부-NGO간 갈등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영역	측정요소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정부-NGO간 갈등	금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 논란	0.316	2위
	금강살리기 사업의 생태계 파괴	0.393	1위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화재 유실	0.165	3위
	금강살리기 사업의 수자원 확보	0.125	4위

※ CR(일관성 비율) : 0.01

##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적 논의

지금까지 「4대강살리기 사업」 중에서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유형 실태분석을 국내·외 하천관리 사례 및 최근 관련자료 분석과 함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하천관리와 관련한 시사점은 국내의 하천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친수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갈등해결과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갈등해결을 민·관 전문가들의 협력적 노력 및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곳이 있으나, 협력거버넌스 구축의 실패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과 시행상의 관리부족으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 또한 국외의 하천관리와 관련한 시사점은 국가별로 하천관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국가간 상호협력 및 공동정책 추진을 통해 해결한 경우와 유역국가간의 경계로 흐르는 강은 조약체결을 통해 해결한 사례, 지자체 및 주민, NGO 등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같이 바람직하게 해결된 경우도 있었으나, 인종·종교·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성과가 크게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내·외 하천관리의 성공·실패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 「4대강살리기」 및 「금강살리기 사업」에 요긴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행위주체별 갈등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부간 갈등의 수직적 갈등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예산낭비와 사업의 지속성 논란, 수평적 갈등에서는 금강하구둑 철거논란과 사업의 원초적 추진 관련 갈등이 가장 두드러졌고,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에서는 보상문제, 채취장 허가 및 준설토, 독 건설을 통한 여론수렴 부실, 공사 진행상의 주민불편 가중 등이, 정부와 NGO간 갈등에서는 종교계의 반대운동,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 논란, 수질악화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이 상당수 표출되었다.

넷째,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격별 갈등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 관련 갈등은 국민여론의 무시, 사업의 정당성 및 객관성 결여, 사업의 지속성 논란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환경파괴와 관련한 생태계파괴, 홍수피해 우려, 보 설치 논란이 가장 많았고, 주민여론 관련 갈등에서는 정부와 주민간의 소통결여 문제, 그리고 보상문제 관련 갈등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갈등, 정부간 갈등에서는 금강하구둑을 둘러싼 인접 타지역 지자체간의 갈등논란, 예산의 중복·낭비 관련 갈등에서는 4대강 사업 홍보로 인한 예산낭비, 정부와 지자체간 중복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위주체별 갈등유형에 있어서 정부와 관련한 갈등 대다수가 모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정치권 및 광역지자체 간의 전면 재검토 주장 등을 충분히 감안, 먼저 소통과 대화노력을 강화하면서 사업내용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가 집단 대상의 AHP 분석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하여 전문가들에게 ‘측정지표 영역’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이원적 비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정부-주민간 갈등요인, 정부간 갈등요인, 정부-NGO 간 갈등요인’ 순으로 갈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문가들에게 ‘측정요소 영역’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이원적 비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정부간 갈등에서는 ‘지자체간 상대적 손익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고, 정부-주민간 갈등에서는 ‘주민들과의 협의 부진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NGO간 갈등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 생태계파괴로 발생하는 갈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정부-주민간 협의 부진, 정부-지자체간 입장차이 노출(이해관계), 정부-NGO간 생태계 파괴우려 등 원초적 사업타당성 논란은 일종의 ‘가치갈등’이므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설득과 협력을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측에 공식문서로 요구한 「4대강(금강, 낙동강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간관계(IGR) 차원에서 ‘속도 조절’ 또는 ‘규모축소’ 등에 관하여 내부조율을 밀도 있게, 신속히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는 물론 주민과 NGO를 대상으로 충분한 소통과 합의, 참여와 공개, 투명과 환류(feedback) 기능을 크게 강화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예방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해 사업시행의 영향권역을 환경적 차원 및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설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제기되었으며,<sup>13)</sup> 이는 아직까지 대규모 공사에도 갈등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나, 충분한 사전 예비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영향권역을 대·중·소 영향권 등으로 구분한다면 환경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갈등영향분석에 실질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구조 분석을 위해 실제 갈등상황과 갈등유형을 연계하고 국내·외 하천관리 갈등관련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발견하였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을 행위주체별 및 성격별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이를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해 측정지표 영역 및 측정항목 영역간의 상대적 중요성과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게 되었다.

끝으로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이해관계)갈등’과 ‘가치갈등’의 관계 즉, 사안별 개별갈등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누적되거나 해소가 전혀 안될 경우,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갈등의 증폭·확산 및 성격변동 메카니즘의 분석적 접근 및 파급효과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13) 참고로 최근 사회통합위원회의 (가칭)「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 “제4장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구와 절차” 중 “제19조 갈등영향평가”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병학 외, 2010b).

## &lt;참고문헌&gt;

- 강성철 외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터.
- 국토해양부 (2009),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계획」.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009. 7),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충남발전연구원·충청남도 (2009),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자료」.
- 김명수 (2009), “금강살리기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금강살리기 대토론회」, 충남발전연구원.
- 김충관 외(2009), “습지인식증진활동,” 「KWP회의자료집」, PGA습지생태연구소.
- 나태준·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 박창재 (2002. 6. 5), “자연형하천으로 되살아나야 할 무심천,” 「하천살리기운동을 통해 본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7회 환경의날 기념 심포지움 발제논문.
- 박형서 외 (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토연구원.
- 배재현 (2009),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 분석: 부산시 하천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8권 2호.
-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2010), 「금강살리기 갈등예방관리 : 동향분석(2009~2010)」.
- 조용현 (2009), “한강살리기 사례를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과제」,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충남발전연구원·충청남도.
- 최병학 (2009a), “금강살리기를 위한 시·군 공동협력 방안”, 「금강살리기 공동협력 포럼」, 주제발표논문,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09b),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실태 및 해소방안,”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주최.
- \_\_\_\_\_ (2009c),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최병학 외 (2007),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연구」, 기획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08), 「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기획과제 최종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09), 「충청남도 갈등관리 인재육성 및 활용방안」, 기획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10a),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실태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부패학회」, 제15권 1호, 한국부패학회.
- \_\_\_\_\_ (2010b),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하여」, 제18회 국정포럼 주제발표, 한국행정학회(5. 6).
- 최정권 (2009), “안양천 살리기 사례를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의 시사점,”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과제」,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충남발전연구원·충청남도.
- 충청남도 (2010. 3),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현황」.
- 한국수자원공사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해양부 홈페이지(2009 희망프로젝트, 4대강살리기), <http://www.mltm.go.kr/>  
 금강유역환경청(온몸으로 체험하는 금강천리), <http://gg.m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http://search.cy.co.kr/view/>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행복4江), <http://www.4rivers.go.kr/>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http://www.icriver.or.kr/>  
 PGA습지생태연구소; <http://www.pgai.or.kr/>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http://www.pcpf.or.kr/>

- Abebe, Mesfin (2010), *The Ni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ttling Account*, Walta Information Center, July.
- Carpenter, Susan L. and W. J. D. Kennedy (1987), "Environmental Conflict Management," in Robert W. Lake (ed.),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New Brunswick, New Jerse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in Rutgers University.
- Environment Agency (2010), *Annual Report for the Non-tidal River Thames 2009/10*.
- Friesecke, Frank (2005), "Flood Risk Management: Flood Prevention by Land Consolidation in the Rhine Catchment Area," *FIG Working Week*, GSDI-8, April 16-21.
- Goliath (2003), "Revising the 1944 Water Treaty: Reflections on the Rio Grande Drought Crises and Other Matters," *Journal of the Southwest*, 22-DEC-03.
- Haddadin, Munther J. and Shamir, Uri (2003), *Water Conflict and Cooperation: Jordan River Basin*, UNESCO-IHP, PCCP Series Publication.
- Interstate Commission on the Potomac River Basin (2009), *Potomac River Basin Drinking Water Source Protection Partnership: Annual Report 2009*.
- Mekong River Commission (2007), *Diagnostic Study of Water Quality in the Lower Mekong Basin*, MRC Technical Paper, No. 15, March.
- Walton, R .E. & Dutton, J. M. (1969), "The Management of Interdepartmental Conflict: A Model and Revi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4.

<http://www.waltainfo.com/index.php>

<http://www.environment-agency.gov.uk/static/documents/>

[http://www.potomacriver.org/cms/drinkingwaterdocs/DWSPP\\_AnnualReport\\_2009.pdf](http://www.potomacriver.org/cms/drinkingwaterdocs/DWSPP_AnnualReport_2009.pdf)

투고일자 : 2010.08.02

수정일자 : 2010.09.23

개재확정 : 2010.09.25